

민주당 “전반개혁 약속” vs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

4·10 총선 공약 비교

1 정치분야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양 정당의 주요 분야 공약을 정치·경제·저출생·사회·외교·안보·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민정(광진을), 이정현(광진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윤용근 중원구, 김은혜 분당구를 장영하 수정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도 정치 개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31일 양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은 바로 개헌과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정당 모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野 국회의원 대한 성과급·벌금제 구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與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양당 모두 개헌·무임금 무노동 공약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헌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특권은 제45조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광범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

법 전문 수록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 명문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외요구권(거부권) 및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헌법 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에서 6인 선출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하면 결석일수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vs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양 정당의 정치개혁 공약의 차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위원은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와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저런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일단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에 대해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지는 취지”라며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특

권층'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나 징계 시 벌금제 등을 도입하지는 입장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국회 예산안 기능 강화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 심의 강화 등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에서 또 눈에여겨 볼 것은 '민영화 방지'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구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비중을 낮추겠다고 했다. 현행 전액 보전 기준은 유효투표수의 15%인데 5%로 낮추고, 반액보전은 10~1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내년 다섯살부터 무상교육 실시” 이재명 “與 악어의 눈물에 속아선 안 돼”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0~12세 국가책임교육 돌봄 완성 목표 유아학비·보육료 대폭 인상 지원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다섯살부터 실시해 3세·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책임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

한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 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 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달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예: 사립학교)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어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국민 공약에는 지난 1월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 담긴 돌봄 개선책을 포함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중·고등 및 급식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실시해 취약자녀 학부모 비용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가 방학 때마다 하던 아이의 기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디에 살든, 어떤 기관에 다니든, 비용 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지역구 인천 계양을 사수 나서 부활절 맞아 교회·성당 찾아

4·10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주요 격전지를 순회하며 재판 일정을 소화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31일 부활절을 맞아 인천 계양구 가나안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린 뒤 서운동성당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앞서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며 다시 살아남을 누리는 부활의 계절”이라며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켜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활절 예배에서는 계양을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도 같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음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으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음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다 엄살”이라며 “예언

하나 하자면 이 사람들이 분명 단적으로 몰려나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면 서로 배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짓은 없다. 속아서는 안 된다”며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나라는 견잡을 수가 없게 돼 심판은 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지역구에 머무르며 ‘안방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지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을 시작으로 동작을(류성영), 용산(강태웅), 강동갑(진선미), 강동을(이해식), 중랑갑(서영교), 경기 남양주를(김병주)을 돌며 격전지 공략 지원에 나섰다.

/박정익·안승진 기자